

미디어 스펙트럼



미-EU 원전 확대 '유턴'... 힘 받는 새 정부 탈원전 백지화

미국과 유럽연합(EU)이 원자력발전소 비중을 높이기로 했다. 화석연료로 인한 대기오염을 줄이려는 미국과 러시아로부터 에너지 의존도를 줄이려는 EU의 목적은 다르지만, 완전 청정에너지 발전으로 가기 위한 중간단계로 원전이 해답이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공언한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백지화하고, 원전 최강국을 건설하겠다는 공약이 힘을 받는 모양새다.

미국 에너지부는 현지 시각 19일 기후변화를 막기 위한 탈(脫) 탄소 에너지 전략 일환으로 원전 소유주와 운영자에 대해 60억 달러(약 7조 4000억 원)에 이르는 노후 원전 자금 지원 프로그램을 개시했다. 현재 미국에서 생산되는 전기 중 원전의 비중은 20% 수준이다. 에너지부는 자

금 부족으로 폐쇄를 선언했거나 폐쇄할 예정인 원전에 대해 연방 정부 차원에서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EU 역시 원전 비중을 다시 높이기 위한 행보를 서두르고 있다. EU는 탄소 중립 차원에서 원전 확대를 검토해왔지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신냉전 기류가 이를 더욱 가속화하는 동인이 됐다. 미국과 함께 러시아에 대한 제재 수위를 높이려고 해도 EU 가스 수입의 40%, 원유 수입의 25%를 러시아에 의존하는 구조로 러시아로부터 '에너지 독립'에 근본적 한계가 있는 까닭이다.

한편 원자력산업협회가 21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관련 산업 분야 해외 수출계약 금액이 2016년 1억2641만 달러(약 1563억 원)에서 2020년 3372만 달러(약 417억 원)로 5년 새 3분의 1토막 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신규 원전 건설 및 노후 원전 수명연장 금지,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의 원전 발전 비중 목표치 삭제 등을 강행한 현 정부의 무리한 탈원전 정책 영향이라는 게 중론이다. 어쨌든 원전 생태계 복원과 관련 산업 경쟁력 확대를 약속한 새 정부의 정책이 우리 경제에 어떠한 ‘메기효과’를 가져올지 주목된다.

〈04-21〉 아시아타임즈
논설실

원전 ‘수명 연장’이란 말 자체가 틀려, ‘면허 연장’이 맞는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1차 운영 허가 기간 만료를 앞둔 원전들의 계속 운전이 용이하도록 관련 제도를 손보겠다고 밝혔다. 한국수력원자력은 탈원전 방침에 따라 내년 4월 운영허가 기간 만료로 폐로될 운명이던 고리2호기에 대해 최근 계속운전 신청 절차를 개시한 상태다. 고리2호기를 포함해 2030년까지 1차 허가 기간이 만료되는 원전은 10기에 달한다.

지금까지 1차 운영 기간을 넘긴 전 세계 원전 224기 가운데 87%인 195기가 10~20년 허가 기간을 연장했다. 미국 경우 운영 원전 93기 가운데 85기가 허가 기간을 연장했다. 이 중 6기는 20년씩 두 차례 연장해 80년까지 운영키로 돼 있다. 여기에 더해 바이든 정부는 최근 허가 기간 만료를 앞둔 원전들의 계속 운전을 돕기 위해 60억달러를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반면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6월 탈원전 선언 때 “설계 수명이 다한 원전 가동을 연장하는

것은 선박운항 선령을 연장한 세월호와 같다”고 했다. 그 후 7000억원을 들여 설비 개선 후 아무 문제 없이 발전 중이던 월성1호기를 경제성 평가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억지 폐쇄시켰다.

‘수명 연장’이라는 용어 자체가 맞지 않는 표현이다. 세계 원자력의 표준과 같은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NRC) 규정엔 수명(life time 또는 life span)이라는 표현 자체가 없다. 면허 갱신(license renewal)이란 용어를 쓰고 있을 뿐이다. 영국에선 같은 의미로 ‘계속 운전(continued operating)’을, IAEA는 ‘장기 운전(long term operating)’이란 용어를 쓰고 있다. 그런데 한국에서만 ‘수명 연장’이라는 말을 쓰면서 마치 수명이 끝나 없애야 할 설비를 억지로 살려 쓰고 있다는 인상을 주면서 거부감을 일으켜왔다. 우리 원전 운영 초기에 1차 허가 기간을 30년, 또는 40년으로 정했던 것도 기술과 경험 부족한 당시에 1차 면허 기간을 최대한 짧게 잡았던 것이다. 최신 원전들은 1차 허가 60년을 기본으로 하고, 20년씩 두 차례 연장으로 100년 가동까지 전망하고 있다.

한국은 특히 계속 운전이 절실하다. 새 원전 부지를 구하기 쉽지 않고, 구하더라도 송배전 선로를 새로 까는 것 역시 어렵다. 또 신규 원전은 한 기 건설에 4조~5조원 들지만 기존 원전의 계속 운전에는 1조원 정도면 충분하다. 기존 원전의 운영 허가 연장으로 침체됐던 원자력 부품 산업을 되살리는 일도 시급하다.

〈04-21〉 조선일보

사용후 핵연료 문제 해결은 법제화로 풀어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기후 위기와 탄소 중립의 대안으로 탈원전 폐기와 원전 최강국 건설을 공약했다. 원자력발전 비중을 30% 이상으로 유지하고, 신한울 3·4호기를 포함 신규 원전 건설을 재개하기로 했다. 인허가 기간이 끝난 원전의 계속 운전과 수출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위기에 빠진 원전산업 생태계의 경쟁력을 회복하겠다는 것이다.

원자력발전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사용후핵연료와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안전 관리가 필수적이다. 방사능 준위가 비교적 낮은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은 2015년 경주 처분장 가동으로 해결됐지만 사용후핵연료는 1978년 고리원전 1호기를 가동하기 시작한 이후 계속 원자력발전소에 저장하고 있다.

정부가 지난 연말 2차 고준위 방폐물 관리 기본계획을 수립, 원자력진흥위의 의결을 거쳤지만 원전 주변 지역 주민과 환경단체들은 원자력발전소가 영구 처분장이 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정치권은 친원전과 탈원전으로 나누어져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 이러한 사이에 2031년 고리·한빛 원전을 시작으로 원전의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은 포화한다.

올 3분기까지 경수로 2만733다발, 중수로 48만476다발 등 총 50만 다발이 넘는 사용후핵연료가 발생했으며 원래 인허가 기간까지만 가동해도 추가로 13만 다발이 넘는 사용후핵연료가

발생할 예정이다. 기본계획에 따르면 계획수립과 부적합 지역 배제(1년), 부지 공모와 주민 의견 확인(2년), 부지 적합성 기본조사(5년), 부지 적합성 심층 조사(4년), 주민 의사 확인과 부지 확정 등 주민들의 동의를 구하는 데만 13년이 걸린다.

방폐장 부지가 확보되면 중간저장시설 건설, 지하연구시설 건설과 실증 연구, 영구처분시설 건설 등에 14년이 더 걸린다. 부지선정부터 건설까지 총 37년이 걸리는 장기 국책사업이다. 경주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장을 건설, 운영하는 경험에 비추어 보면 결국 사업의 성공은 관련 법제화에 달려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법제화와 함께 관련 이슈의 지속적인 논의를 통한 사회적 합의를 달성하기 위한 추진체계가 필요하다. 사용후핵연료의 임시 저장 확충은 현행법으로도 가능하지만, 지역주민의 입장에서는 향후 계획을 확인하고 관련 논의에 참여하기를 원한다.

에너지 안보와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해서 원자력을 적극 포함하는 에너지 믹스가 국가적으로 필요하다. 원자력 발전의 지속적 추진과 녹색기술 분류체계 포함을 위하여 사용후핵연료 관리 계획은 차기 정부의 최우선적 과제로 추진돼야 한다.

〈04-21〉 중앙일보

조선대학교 원자력공학과 송준승 교수

SMR은 재생에너지와 친구가 될 수 있나?

SMR 즉 소형모듈형원자로 개발의 역사는 20년도 더 되었지만 지난해부터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부쩍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세계적으로 70여개의 SMR 모델이 개발되었거나 개발 중에 있다고 한다. 가장 큰 이유는 무엇보다도 원자력을 배제하고 2050 탄소중립이 실현 가능하다고 보는 나라가 많지 않기 때문이다. 대안으로 떠오른 재생에너지는 경제성이 아직 부족하고 독자적인 안정성은 필요에 더욱 미치지 못한다. 때문에 안전성에 대한 불신이 여전하고 출력조절이 어려운 대형원전 대신 한층 안전성이 높은 SMR을 재생에너지와 함께 미래의 주된 전력 원으로 삼으려는 시도라고 할 수 있다.

현재 상업화에 가장 가까이 와 있다고 하는 뉴스케일(NuScale)사의 SMR 설계 설명서에 따르면 SMR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고유(Inherent) 안전성을 가진다. 원자로와 증기발생기 포함 원자력 증기발생기 모듈 전체가 압력용기 속에 내장되어있다. 압력용기는 다시 수조 속에 설치된다. SMR은 피동 정지형이므로 외부에서 전원이 공급되지 않더라도 자동정지 및 잔열제거가 가능하다. 원자로 사고 시에는 수조속의 물로 30일간 잔열제거가 가능하고 30일 후에는 공기냉각으로도 충분히 연료봉의 손상을 막을 수 있다.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출력조절의 용이성이다. 전력수요는 매 일, 매 시, 매 분, 매 초 변동하

므로 발전량도 그에 따라 변동하여야 한다. 저장 이 불가능한 교류전력의 특성 때문이다. 현재까지의 방법은 원자력과 화력발전소처럼 용량이 크고 기동정지 및 출력조절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 발전소는 기저부하용으로 최대출력 운전을 하고 가스발전이나 수력발전소의 발전출력을 조절하므로 써 수요와 공급을 맞추고 있다. 이처럼 부하 증감에 따라 출력을 조절하면서 운전하는 방식을 부하추종(Load Following) 운전이라고 한다.

부하추종 운전은 경우에 따라 수 초 이내에 반응이 필요한 자동주파수제어(AFC)와 수 분 이내 반응이 필요한 자동출력제어(AGC)가 있다. 그 밖의 기저부하운전 발전소는 필요시 유연운전을 하게 되는데 통상 정격 발전량의 50~100% 사에서 조절이 가능하며 분당 허용 제어량(Ramp Rate)이 정해져 있다. 부하조절에 긴 시간을 필요로 한다는 의미이다. SMR의 경우는 증기 바이패스와 연료봉 제어 방식으로 부하추종 운전이 가능하고, 가동 원자로 모듈수를 조절하므로 써 보다 신속하고 유연하게 출력을 조절할 수 있다.

발전설비의 출력조절 특히 부하추종 운전이 더욱 강조되는 이유는 전력계통에서 원천적으로 변동성이 큰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증가하게 되면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이외의 발전설비가 현재에 비해 훨씬 더 유연하게 출력을 조절하여야만 하기 때문이다. 기동정지가 신속한 가스발전의 비중을 높이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지만, 이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에서 보듯 에너지 수급불안이 경제 불안 나아가 안보 불안으로 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에너지 해외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재생에너지 증가에 대한 보완과 탄소 저감이 동시 가능한 SMR이 다른 나라들에 비해 더욱 유용할 것이다.

〈04-19〉 전기신문

한국전력국제원자력대학원대학교 장중구 교수

윤석열 정부에 거는 산업계의 기대

“정부조직 개편 문제는 인수위 기간 중 조급하게 결정해서 추진하기보다는 최근 국내외 경제 문제, 그리고 외교 안보의 엄중한 상황을 고려해 민생 안정과 외교 안보 등 당면 국정 현안에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지난 7일 아침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정부조직 개편과 관련한 안철수 인수위원장의 긴급 브리핑이 예고됐다. 여성가족부 폐지, 산업통상자원부의 통상 기능 외교부 이전 등을 놓고 논의가 뜨거웠을 때다. 발표 내용은 예상과 달랐다. 정부 조직 개편 방향에 대한 결론 대신 정부 출범 이후로 논의를 미루겠다고 밝혔다. 안 위원장은 새 정부 초대 내각 인선도 현행 정부조직 체계에 기반해서 추진하겠다고 부연했다.

신선했다. 새 주인이 들어오면 집 단장 부터 하고 싶기 마련이다. 정부 조직 개편안은 새 정부의 상징처럼 인수위에서 언제나 비중있게 다

뤄져왔다. 인수위는 50여일 남짓에 불과한 활동 기간에 논란 거리를 최소화하면서 국정 운영의 큰 방향을 그리는 데 집중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여소야대의 국회 상황도 고려한 판단으로 보인다. 조직개편안을 마련하더라도 실상은 언제 통과될지 장담할 수 없다. 문재인 정부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국회 제출 41일 만에, 박근혜 정부에선 52일 만에 국회 문턱을 넘었다. 정부 조직을 어떻게 바꾸든 장, 단점이 있기 마련이고 형태 보다는 사람과 운용이 더 중요하다는 이들도 적지 않다.

분명한 것은 정부 조직 개편안을 뒤로 미룰 만큼 인수위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이다. 인수위는 새 정부의 철학을 국정 과제로 구현하면서도 이전 정부와의 연속성을 갖도록 가교 역할을 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국민, 기업, 시민단체, 전문가 그룹 등 경제, 민생 현장과의 소통도 중요하다.

문재인 정부는 국정 농단 사건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되면서 인수위 기간 없이 출범했다. 정부 출범 후 인수위 역할을 할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가동됐지만 한계가 있었다. 이미 국정 운영이 시작된 상황에서 이전 정부의 정책들을 선별해 발전적으로 승계하기가 어려웠고, 선거 과정에 나온 거친 정책들도 현실에 기반해 다듬는 과정이 부족할 수 밖에 없었다.

탈원전 등 문재인 정부의 주요 정책들에 대한 논쟁이 임기 내내 이어지고 환경단체, 시민단체, 노동계에 비해 기업과 산업계가 소외됐다는 평

가가 나온 것도 이런 ‘인수위의 부재’가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산업계에서 윤석열 정부에 대한 기대감이 어느때보다 큰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 윤 당선인 스스로 “우리나라가 이제는 정부 주도에서 민간 주도로 (경제가) 탈바꿈해야 한다”는 생각을 피력했다. 새 정부의 경제팀장 역할을 할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도 “우리 기업들은 정부의 지원을 기다리기보다는 ‘발목을 잡지 마라’, ‘우리는 마음껏 뛰고 싶는데 활동을 제약하는 법령과 제도가 많다’고 말한다”며 “구체적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나 기본적으로 민간, 기업 중심으로 하겠다”고 재차 확인했다.

산업계의 얘기만 듣자는 게 아니다. 적어도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고, 현실에 맞지 않는 정책은 조정할 필요가 있다. 국경 없는 경제 전쟁의 최선봉에 기업들이 있다. 일자리와 소득으로 이어지는 경제 선순환의 고리도 기업에서 시작된다.

풀어야 할 과제들이 많다. 탈원전 기반 하에 설계된 탄소중립 로드맵을 다시 점검해야 한다. 경쟁국들에 비해 높은 수준인 법인세율과 상속세율이 적정한지도 따져봐야 한다. 반도체 등 전략 산업과 미래 산업에 대한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들도 최대한 해소해야 한다.

새 정부가 당장 모든 해법을 내놓을 순 없다. 그럼에도 정권 초 국정 운영의 큰 방향을 어떻게 설계 하느냐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문재인 정

부를 포함한 이전 정부들에서 충분히 목격했다. 인수위의 어깨가 무거운 까닭이다. 20여일 남은 인수위가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 정부 조직 개편을 미룬 결정은 잘한 일이다.

〈04-18〉 머니투데이

진상현 산업1부장

원전 6기 예정대로 만료되면 국민 부담 年 6조원 는다

지난 3월 선거는 원전 산업 종사자에게는 정말 중요한 전환점이었다. 국가 경제와 현대 삶의 근간인 전기 에너지를 어떻게 국민에게 이롭게, 국민을 위해 제공하느냐를 결정하는 중요한 순간이었기 때문이다.

탈원전 정책처럼 객관적 사실과 과학기술에 근거하지 않은 일방적 정책은 없었다. 다행히 윤석열 정부는 탈원전 폐기, 신한울 3-4호기 즉시 재개, 운영 허가 만료 원전의 계속 운전 추진 및 원전 산업 생태계 활성화 등의 원자력발전 정책을 근간으로 원자력과 신재생에너지를 조화하는 에너지 정책을 채택했다. 최근 한국수력원자력도 이러한 정책 변화에 맞추어 고리 2호기 계속 운전 안전성 평가 보고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새 정부에서 운영 허가 기간이 만료되는 원전 6기의 계속 운전은 현행 제도나 관행으로는 순탄한 추진을 기대하기 어렵다.

계속 운전이야말로 원자력 생태계를 조속히

활성화하는 최고 마중물이다. 그 이유는 신한울 3-4호기 건설은 빨리 추진한다 해도 주 기기를 공급하는 두산중공업과는 다르게 2차 기기를 주로 공급하는 중소 업체는 빨라야 2~3년 지난 후에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반면 계속 운전이 계획대로 추진된다면 앞으로 6년 이내에 10기 기준으로 5조원이 넘는 막대한 사업에 국내 중소 기기 제작 업체 및 엔지니어링 업체 수백 곳이 곧바로 참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기대와는 다르게 탈원전의 폐해와 불합리한 국내 제도로 계속 운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이를 극복하려면 첫째, 지난 5년간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미루어왔던 조치를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 한수원은 운영 허가 만료 2년 전까지는 제출해야 했을 고리 2호기의 신청 시기를 놓쳤으며 고리 3-4호기, 한빛 1-2호기도 신청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이를 만회하기 위해 한수원은 신규 원전 건설 조직에 버금가는 계속 운전 전담 조직을 구성하는 등 특단 대책을 수립해 추진해야 할 것이다.

둘째, 계속 운전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계속 운전 제도는 신청 기간도 운영 허가 만료일 기준으로 2년에서 5년 전으로 한정되어 있고 심사 기간도 명확하게 기술되어 있지 않다. 과거 월성 1호기의 사례를 볼 때 인허가 만료 3년 전에 신청하였는데도 6년이라는 심사 기간이 걸려 실질적으로 계속 운전 가능 기간은 10년이 아닌 7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

설비 투자 시점에 대하여도 불확실하여 선행 투자라는 논란이 있었다. 심사 기간 단축, 설비 개선을 전제로 한 계속 운전 허가 등 합리적 제도 개선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셋째, 원안위의 전문성과 독립성 강화다. 전문성과 상식에 벗어난 심사 진행으로 의도적 시간 끌기를 한다면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취지를 발휘하기 어렵다. 원안위는 오로지 원전 안전만을 과학적 사실과 기준에 근거해서 판단하면 될 일이고, 그럴 준비가 되어 있는 전문가로 구성되어야 한다.

새 정부에서 계속 운전 대상이 되는 원전은 총 6기, 5150MW 용량이다. 잘못된 관행과 제도로 만약 계속 운전 시행이 1년씩 늦어져 LNG로 발전을 대체한다면 한전은 작년 평균 구입 단가 기준으로 2조5000억원,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에너지 가격 급등 영향을 받은 지난 3월 평균 구입 단가 기준으로는 6조원을 더 지불해야 한다. 결국 죄 없는 국민이 부담하게 되는 것이다.

〈04-18〉 조선일보

전 한국수력원자력 이종호 기술본부장

탈원전 책임 끝까지

물어야 같은 잘못 되풀이 안 한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문재인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에 대해 “실제로 실현 가능성이 크게 떨어진다”며 사실상 전면 폐기를 선언했다. 탈원전을 앞세워 탄소중립

을 달성하겠다는 문 정부의 기후-에너지 정책에 대한 전면 재검토와 대대적인 개편을 예고한 것이다.

인수위가 문 정부 에너지 정책에 대해 비판한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과 무관하지 않다. 문 대통령은 “탄소중립의 근간은 유지돼야 한다”며 윤 당선인의 탈원전 정책 폐기에 사실상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이에 인수위가 탈원전을 근간으로 한 문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 문제점을 지적하며 탈원전 정책 폐기를 거듭 확인하고 나섰다.

문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은 허점투성이란 게 인수위 주장이다. 온실가스를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40% 감축하겠다고 했지만 온실가스 배출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2021년 온실가스 배출량이 전년에 비해 4.16% 늘었다. 원전은 감소한 반면 석탄 발전이 소폭 증가하고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이 급증한 탓이다. 탈원전으로 인한 한국전력의 추가 비용 발생, 원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문 정부는 전기료 인상 부담을 다음 정부로 전가했다. 문 정부의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그대로 추진할 경우 2050년까지 매년 4~6%의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게 인수위 설명이다.

산업계 등 이해당사자와의 충분한 소통 없이 일방 추진된 문 정부의 탄소중립은 보완이 필요하다. 원전 없이는 탄소중립이 불가능한 만큼 탈원전 정책 폐기는 당연하다. 대통령이 재난 영화를 보고 나서 정책 의지를 굳히고, 원전과는 거

리가 먼 환경론자들이 추진한 탈원전 정책은 수많은 폐해들만 양산했다. 세계 최강 수준인 원전 생태계는 5년 새 초도화됐고 원전 수출은 실패했다. 탈원전 정책 폐기는 마땅하다. 나아가 탈원전 정책 추진 과정에서 벌어진 온갖 불법에 대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정 수사해 책임을 끝까지 물어야 한다. 이렇게 해야 탈원전과 같은 정책 실패를 다시는 되풀이하지 않을 수 있다.

〈04-13〉 매일신문

원전을 잘 아는 사람이 지역의 행정을 맡는다면

“원자력발전소가 그렇게 안전하다면 서울에 지어라”

지역의 환경단체에서 자주 하는 말이다. 원전이 안전하다는 정부의 말을 믿을 수 없다는 것이다. 부산 사람 처지에서는 틀린 말도 아니다.

꼭 안전 때문만은 아니다. 원전 인근은 지원을 받기도 하지만 여러 사유로 개발에 제한을 받는다. 그래서 원자력 관련 업종에 종사하면서 생활 환경이 좋은 서울에 사는 사람들이 알뜰기도 하다.

원전에서 책임자로 근무해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 원전 근처로 가족들과 함께 이사 오고 퇴임 후에도 계속 거주하는 것을 어떻게 봐야 할까?

이번에 기장군수 예비후보로 출사표를 던진 우중본 전 고리원자력본부장이 화제다.

공무원과 달리 공기업에서 정년을 마친 사람이 정치에 뛰어드는 것이 흔한 일은 아니다.

“튀면 죽는다”는 복지부동의 자세가 오랜 근무로 체질화된 이들은 적당한 보수로 직업 만족도가 높아 험난한 정치 세계로 뛰어들 용기가 생기지 않는다.

기장군은 문재인 정부 탈원전의 상징인 고리1호기가 있는 곳이며 고리2·3·4호기 수명연장을 비롯해 구역전기사업자인 부산정관에너지의 잦은 정전 등 에너지 이슈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곳 중의 하나다.

고리원자력본부에 많은 직원이 근무하고 기장군에 살고 있지만, 이들이 적극적으로 지역의 정치에 참여하지는 않는다. 이들 대부분이 교양 있는 중산층이지만 고향이 아니면 선출직 공무원이 되기 힘들기 때문이다.

발전소와 같은 주민기피시설은 주민수용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사회기반시설을 지어주기

도 하고 지역 주민을 우선하여 채용한다. 발전소 입장에서는 수동적인 대응이라고 볼 수도 있다.

반대로 발전소에서 근무했던 사람이 그 지역의 정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민들의 선택을 받는 것은 또 다른 의미가 있다.

기장군은 고리2호기 계속운전 및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 등 원전 관련 현안이 넘친다. 기장군수가 정부를 상대로 밀고 당기는 줄다리기를 해야 한다. 단순히 학문적으로 원전을 잘 아는 것이 아니라 고리 원전을 현장에서 경험했고 지역 주민의 민심을 알고 행정을 아는 사람이 필요하다.

이런 곳에 원자력과 구역전기사업을 모두 경험했던 에너지전문가가 그 지역의 행정을 맡게 되면 그것도 나름대로 상징적 의미가 있다. **KIF**

〈04-07〉 전기신문

윤재현 기자